

유비쿼터스 사회에서의 언론권 주체

-전자파놉티콘(전자감시)과 전자시놉티콘(전자 역감시)을 중심으로-

이 동 훈*

I. 서 론	III. 유비쿼터스 사회에서의 언론권 주체의 새 패러다임-전자파놉티콘(감시)과 전자시놉티콘(역감시)
1. 디지털 미디어와 퍼스널 미디어 혁명	1. 언론권 주체의 새패러다임의 논거
2. 문제의 제기	2. 각 언론권의 주체 상호간 균형적 언론 자유의 실현을 위한 모색
II. 전통적 언론권의 주체-파놉티콘원리	IV. 결 어
1. 2면 관계에서 형식적 3면 관계으로 변화	
2. 형식적 3면관계의 문제점	

I. 서 론

1. 디지털 미디어와 퍼스널 미디어 혁명

21세기의 세계화·지구촌에 살고 있는 인간들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는 수단과 인간들의 사회문화적 환경 변화를 특징짓는 현상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디지털(digital)'이다. 디지털은 인간 생활에 가까이 다가오면서 인간에게 커뮤니케이션의 형태와 삶의 질, 더 나아가 사회문화적인 환경에 있어서도 혁명을 야기 시키고 있다.

디지털 미디어의 발전은 산업사회 이후를 정보사회, 신지식사회, 디지털 사회, 유비쿼터스 사회¹⁾ 등 다양한 신조어를 만들었고, 이는 우리의 사회생활에 혁명적이라

* 세명대학교 법학과 교수.

할 만큼 우리 사회의 모든 것들을 바꾸게 하였다.

불과 10여 년 전 ‘월드 와이드 웹(world wide web)’에 접속하는 인터넷이 처음 선보인 후 우리의 생활환경은 매우 빠른 속도로 변하게 되었는데, 이는 지난 수십 년에 걸친 사회변화의 속도보다 빠른 것이었다. 지금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고, 상품을 구매하고, 게임과 채팅을 즐기는 등, 디지털 기술과 관련된 사회적 환경 변화는 우리의 사적·공적 모든 생활을 지배하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기술은, 인터넷 신문, 인터넷 방송, 웹진, 디지털 방송, 무선 인터넷, 포털 사이트, 홈페이지, 미니 홈페이지, 블로그 등의 사이버 공간을 만들어 시간과 공간의 경계를 무너뜨렸고, 컴퓨터와 네트워크의 융합으로 아날로그 시대의 인쇄매체 · 방송매체 · 통신매체 간 경계를 무너뜨렸다. 이는 수천 년 동안 인간을 지배하여 온 전형적인 커뮤니케이션 패턴을 무너뜨린 유비쿼터스 사회의 도래를 의미하는 것이다.

유비쿼터스 사회의 디지털 미디어는 기존 미디어의 기술적 한계를 넘는 사회발전의 주역이 되었다. 디지털 미디어는 전세계에 일방향적 네트워크가 아닌 쌍방향적 네트워크를 통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실시간 혹은 원하는 시간대에 용이한 접근이 가능하여 집에 따라 기존의 인간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에 대한 ‘퍼스널 미디어 혁명’이 나타나서 언론권 주체에 새로운 패러다임의 사회적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

그 실례가, 2002년 한일 월드컵 공동개최에서 소수의 붉은 악마가 시작한 거리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것, 그 해 미군 장갑차에 치어 죽은 두 여중생의 추모 촛불 시위, 같은 해 대통령선거에서 노사모라는 단체에서 기존의 선거운동과 달리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으로 노무현 대통령 후보가 당선된 것, 2005년 고교 1년생들의 고교내신등급제 반대 시위 등의 일련의 사건에서 ‘퍼스널 미디어 혁명’이 나타났다. 이들 사건의 공통점은 처음에는 언론의 관심을 받지 못하였지만, 사이버 공간 상에는 네티즌들에게 주요한 관심거리와 토론거리로써 쟁점화 되자 언론이 뒤늦게 관심을 갖고 주요 뉴스로 보도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퍼스널 미디어 혁명’은,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전통적 언론권 주체의 해석에서 벗어나, 인터넷을 통한 여론형성과 정보교환 그리고 이를 통한 자발적·참여적 사회운동을 통하여 언론권 주체 해석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1) 유비쿼터스라는 용어는 ‘신은 어디에나 존재 한다’라는 의미이고 라틴어에서 유래한 말이다. 이 말은 21 세기 들어 극소형화 되고 촘촘하게 연결된 반도체·정보통신 등 첨단 디지털 기술이 인간 생활을 변화시키는 거대한 흐름을 의미한다. 유비쿼터스라는 용어는 결국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인간들의 삶의 특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개념이다.

2. 문제의 제기

근대사회에 있어서 언론의 자유는 이념적으로 「국가로부터 언론의 자유」 환언하면 「국가에 의하여 언론이 억압 받지 않는 자유」를 의미하였다. 이 시대에서 언론 자유의 주체는 국가권력과 언론기관(국민 포함)과의 양면구조이고, 언론기관과 국민은 일체가 되어 국가의 언론 자유의 억압에 대항 하였다. 이러한 의미의 언론자유는 근대사회에서 뿐만 아니라 현대사회에서도 매우 중요하다.²⁾ 근대사회는 국가만이 언론권의 주체였고 국민과 언론기관은 수동적인 언론권의 객체에 불과하였고, 국가가 언론기관과 국민을 감시·관찰·지배하는 ‘파놉티콘’³⁾원리가 적용되었다.

그러나 매스미디어가 거대화·독점화·계열화·집중화하는 산업사회에서는 근대적·전통적 의미로서의 언론의 자유의 해석으로는 완전한 기능을 다할 수가 없게 되었고, 새로운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언론자유 구조적 변화가 나타났던 것 이었다.

즉 자본주의사회의 발전에 의해서 언론기관도 대중화되고 독점화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 「보내는 측」인 매스미디어(송신자)와 「받는 측」인 국민(수용자)이라는 2개의 계층이 분리되게 되었다.⁴⁾ 이것은 매스미디어와 국민(수용자)간에 상호교환성이 없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산업사회에서는 언론기관(송신자)의 언론자유와 국민(수용자)의 언론자유는 분리되는 필연적인 것이 되었고, 언론자유 주체는 「국가 대 매스미디어 대 국민(수용자)」의 3면 관계 구조가 되었다.

여기서 「국가 대 매스미디어 대 국민(수용자)」의 3면 관계 구조에서 가장 힘이 약한 국민(수용자)에게 정보의 자유 내지 알권리·엑세스권 등을 부여하여 언론자유 3면 관계 구조를 유지하였으나, 실질적 3면 관계가 아니라 형식적 3면 관계에 그쳤다. 국가와 매스미디어는 전자미디어를 이용하여 우월적 지위에서 국민의 일거수일투

2) 堀部政男, アクセス權,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1982, 32頁.

3) 파놉티콘이란 말은 그리스어에서 유래된 말이다. pan은 fully(모두), opticon은 visible(볼 수 있는)의 뜻이다. 다시 말해 파놉티콘은 ‘모든 것을 볼 수 있다’라는 의미이다. 파놉티콘은, 프랑스 철학자 미셸 푸코(M. Foucault)가 1975년에 발표한 ‘감시와 처벌’이라는 저서에서 영국의 철학자 벤담(Jeremy Bentham)이 1791년에 제안한 원형감옥 파놉티콘에서 착안하여 19세기 이후 서구사회를 지배한 권력이 ‘군주권력’에서 ‘규율권력’으로 역전된 과정을 비유하면서 ‘스펙터클사회’에서 ‘감시사회’로의 변화를 상징한 말이다. 이 글에서 전자파놉티콘이란, 소수의 권력자(국가와 언론 등)가 전자미디어를 매개로하여 정보나 지식을 수집·이용·관리하고, 그 정보나 지식을 이용하여 대다수의 국민을 감시·통제·지배한다는 말이다.

4) 堀部政男, “アクセス權論”, 『ゾコリスト』, 573號(1974. 10. 15), 40頁.

죽을 감시·관찰·지배하는 ‘전자파놉티콘(electronic panopticon)’원리가 적용되어 국민(수용자)은 수동적인 지위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유비쿼터스 사회에서는 ‘퍼스널 미디어 혁명’《즉, 소수가 다수를 감시하는 ‘전자파놉티콘(electronic panopticon)’ 원리에 대한 반작용으로, 다수인 국민(시민단체나 네티즌포함)이 인터넷매체 등을 통하여 소수 권력지배자인 국가나 매스미디어를 감시하는 ‘전자시놉티콘(electronic synopticon)’⁵⁾의 등장이다.》을 통하여 액세스권·알권리 등을 행사하게 되어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국민주권을 보유한 전자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있게 되었다. 유비쿼터스 사회에서 퍼스널 미디어 혁명은 국민에게 국가와 매스미디어에 비해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역학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전자시놉티콘적 네트워크 권력의 주체가 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국민이 전자시놉티콘적 네트워크 권력의 주체를 가지면, 전자파놉티콘을 갖고 있던 국가와 매스미디어와의 역학관계가 지금까지의 언론권 주체의 수동적 3면관계에서 능동적·쌍방향적·균형적 언론권 주체의 3면관계로 형성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종전의 국가나 매스미디어가 갖고 있던 전자파놉티콘 원리에 의한 언론권 이론으로는 언론권 주체의 3면 관계가 진정한 균형을 이룰 수 없다는데 문제의 초점을 두고, 언론권 주체의 3면 관계 중 가장 힘이 약한 국민에게 전자시놉티콘을 갖도록 하는 네트워크 권력 이동 현상을 분석하여, 유비쿼터스 사회에서 구현할 수 있는 언론권 주체의 균형적 3면관계를 논하고자 한다.

II. 전통적 언론 자유의 주체-‘파놉티콘(panopticon)’원리

1. 2면 관계에서 형식적 3면 관계로 변화

근대사회에서 언론의 자유는, 이념적으로 「국가로부터의 언론의 자유」, 바꾸어 말하면, 「국가에 의하여 언론이 억압받지 않는 자유」를 의미하였다. 그 시대에는 언

5) 시놉티콘이란 말은 매티슨(Thomas Mathiesen)이 한 말로, 소수 권력자가 다수를 감시하는 파놉티콘 때문에 다수 국민이 소수권력자를 감시하는 미디어의 발달을 시놉티콘이라고 명명하였다. 이 글에서 전자시놉티콘은 대다수의 국민이 소수의 권력자(국가나 언론)를 디지털미디어를 통해 역감시한다는 의미이다. 전자파놉티콘은 일방향적 매커니즘인데 전자시놉티콘은 권력자와 대중이 동시에(syn) 서로를 보고 감시하는 쌍방향적 매커니즘이다: 더욱 상세한 것은 Thomas Mathiesen, "The Viewer Society: Michel Foucault's 'Panopticon' Revisited", Theoretical Criminology 1(1997), pp.215~234.

론의 자유를 에워싸고 있는 긴장관계는 국가권력과 언론기관(국민포함)과의 사이에 존재하였다. 즉 국가권력과 언론기관(국민포함)의 긴장 대립관계의 양면구조로 파악하였다. 이러한 의미의 언론자유는 그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중요하다. 특히 독재국가나 많은 후진국가에서는 국가에 의한 언론 자유 침해 정도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근대국가에서 현대국가로 진행됨에 따라 언론기관도 거대화·독점화·계열화·집중화하여 다양한 정보나 소수자의 의견이 사회에 전달되는 것을 저해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 정보의 「보내는 측」인 언론기관과 언론기관에서 소외받는 정보의 「받는 측」인 국민이라는 2개의 계층이 마치 양자간에는 자본가와 노동가의 관계처럼 발생하게 되었다.

배런은 매스미디어의 발달이 ‘미디어 경영가(media manager)’라는 새로운 계급을 낳게 했으며,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는 주로 그들만의 독점물이 되었다고 주장한다.⁶⁾ 그것은 원래 언론자유는 향유 주체로서 일체를 이룬다고 생각되었던 미디어와 국민 간에 일정한 대립관계가 생겨 ‘언론기관의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언론의 자유’의 분리는 필연적으로 등장한다. 언론기관에서 소외받는 정보의 「받는 측」인 국민은, 특히, 소수자 의견 집단은 자신의 의견표명을 위해서, 데모, 연설, 빠라, 팜플렛 등의 표현수단을 사용하고 있다. 그렇지만 그 전달 능력은 언론기관의 전달능력에 비해 아주 미미하다. 여기에서 국민은 어떠한 형태로든지 언론기관에 액세스(접근)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언론기관의 입장은 국민의 알권리도 중요하지만 언론기관 자신도 언론의 자유(특히 편집권)를 향유할 입장이 있으므로 언론기관과 국민 간에는 일정한 대립관계가 생겨나게 되었다.

이러한 언론자유 구조변화 때문에 종전의 「국가 대 언론기관과 국민」의 양면관계가 「국가 대 언론기관 대 국민」의 3면관계가 되고, 이 관계 중 가장 약자인 국민에게 실질적·균형적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여 주기 위해 알권리와 알권리를 구체화하는 액세스권 등이 등장한 것이다.

그러나 알권리나 액세스권이 등장하더라도 지금까지는 국가와 언론기관의 이해관계로 인해 이들 권리들이 국가와 언론기관에 의해 불균형·편파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표면적으로는 언론기관이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공공의 광장(public forum)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것처럼 떠들지만,

6) J. A. Barron, Freedom of the Press for whom? The Right of Access to Mass Media(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73), p.5.

실질적으로는 국민들이 진실로 알기를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정보조작을 통해 왜곡된 사실을 보도하거나 자신들에게 불리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다반사이다. 또, 일반 국민들이 자신의 의사를 여러 사람에게 전달하려 할 때 팜플렛이나, 우편, 전화, e-메일 등을 이용하여 할 수 있더라도 전달 범위는 극히 제한적이고 매스미디어를 이용하지 않고는 광범위한 전달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언론기관이 보도의 자유나 편집권의 자유 등을 남용하여 국민들의 의견이나 사상을 사적 검열함으로써, 언론기관도 국가처럼 국민의 언론 자유를 억압하는 성격을 띠게 되는 문제점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2. 형식적 3면관계의 문제점

독일의 사회학자 베버(M. Weber)는 '소유로서의 권력(power as possession)'을 중시한다.⁷⁾ 우리가 흔히 말하는 '권력을 갖고 있다'라는 말이 베버의 관점이다. '권력을 갖고 있다'라는 말은 '권력을 빼앗을 수도 있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권력에 대한 저항이 따른다. 권력은 사람의 의도나 의지와 관련되어 있다는 관점이다.

이것은, 개인적 관점에서, 무엇을 소유한 자가 소유하지 못한 자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하도록 강요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권력은 의도적(intentional)인 속성이 있고, 저항에 직면하여 그것을 극복함으로써 실현되며, 안정적이고 정형화된 권력 패턴이 자리 잡게 되면 지배 체제로 형성되기도 한다는 것이다.⁸⁾

이와 유사하지만 영국의 사회학자 반즈(B. Barnes)는 '사회질서로서의 권력(power as social order)'을 중시한다.⁹⁾ 그는 개인들 간의 상호작용이 유형화된 결과로 나타난 질서를 중시한다. 예를 들면, 신호등을 보고 차를 정지하는 운전자와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려는 보행자 사이에서는 누가 권력을 행사하는 것인가를 알기는 어렵다. 둘 다 사회질서를 유지하려는 규범으로 권력행사를 받아들이는 상황이기 때문이다.¹⁰⁾ 이것은 관념적(상상적) 관점에서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의 형태로 표출되는 이상적 인

7) T. Jordan, *Cyberpower: The culture and politics of cyberspace and the internet*(London: Routledge, 1999), pp.7~19.

8) 이재현, 인터넷과 사이버사회, 커뮤니케이션북스, 2000, 254면.

9) T. Jordan, op, cit.

10) 장승권외, 디지털권력, 삼성경제연구소, 2004, 19면.

간형을 지향하는 관점이다.¹¹⁾

이들과 달리 프랑스의 철학자 푸코(M. Foucault)는 권력을 소유로 보지 않고 ‘지배로서의 권력(power as domination)’을 주장한다. 지배자와 피지배자 간의 네트워크(관계)를 강조하여, ‘권력이란 소유나 사회질서가 아니라 네트워크(관계)’로 본다.¹²⁾ 권력 관계는 군주나 국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며, 개인의 능력이나 특성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다. 권력이란 네트워크에서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은 어디에서도 볼 수 있다. 권력을 억압, 제약, 금지 등과 같은 의미로 인식하기보다는 현실 그 자체를 만들어내는 과정으로 보아야 한다. 권력이란 객체가 어떤 영역에 속하는지, 그리고 진실과 지식이 무엇인지를 정해준다. 그래서 권력행사 자체가 지식산출이라는 목적을 갖게 된다. 결국 지식은 권력의 효과이며 결과물이 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권력을 보는 관점을 ‘소유에서 관계로’, ‘사물에서 과정으로’, ‘점에서 선으로’, 노드에서 링크로 바꾸자는 것이다. 이것이 푸코의 관점이다.¹³⁾ 이는 사회적 관점으로 권력은 소유라기보다는 지배와 피지배의 망이라는 불평등 관계 속에서 산출되는 관계라는 것이다.¹⁴⁾

즉, 푸코는 권력을 네트워크 속에서 이루어지고 만들어지는 과정으로 본다. 그는 중세의 권력과 근대의 권력이 다르게 행사되었다고 말한다. 절대 왕권이 주권을 상징하던 중세에 권력이란 군주 개인의 소유로 인격화되어 있었다. 당시 군주는 자신에게 도전하는 반역자들은 군중이 모인 자리에서 잔인하게 처형하였다. 이를 ‘스펙터클사회(spectacle society)’라고 하였다. 그러나 근대에 들어서서는 스펙터클사회가 ‘파놉티콘사회(panopticon society)’로 바뀌게 되었고, 통치권력도 ‘비인격화된 보이지 않는 규율권력’으로 바뀌게 되었다. 처벌 역시 모든 사람이 모두의 행동을 감시하는 감시시스템을 통해서 공개처형이 아닌 내부화 시스템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런 방식의 대표적인 것이 푸코가 말한 ‘모두 볼 수 있다’라는 의미의 ‘파놉티콘(panopticon)’이다.¹⁵⁾ 정부, 언론사, 학교, 군대, 병원, 회사 등에서 서류를 만들고 평가하고 분류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면서 이를 통해 「비인격화된 보이지 않는 규율권력」인 ‘파놉티콘’이 개인을 규율하고 통제하게 된다.

근대사회에는 전통적 언론 자유의 주체인 국가만이 ‘파놉티콘’을 설계하고 관리하

11) 더욱 자세한 것은, 이재현, 전게서, 255~256면 참조

12) 장승권외, 전게서, 19면: 더욱 상세한 것은 M. Sarup, An Introductory Guide to Post-Structuralism and Postmodernism(New York: Harvester Wheatsheaf, 1988)참고할 것.

13) 장승권외, 상게서, 19~20면.

14) 이재현, 전게서, 255면.

15) 장승권외, 전게서, 13~14면.

었다. 국가는, '파놉티콘'이라는 시스템 속에서 언론 통제의 주체이며 「비인격화된 보이지 않는 규율권력」으로서, 「보여 지는 대다수 피지배층」인 언론기관과 국민들을 한 방향으로 통제를 하였다. 이는 이념적으로 「국가로부터 언론의 자유」, 바꾸어 말하면, 「국가에 의하여 언론이 억압받지 않는 자유」를 의미하였다. 그 시대에는 국가 권력과 언론기관(국민포함)의 긴장관계의 양면구조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의미의 언론자유는 그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중요하다.

근대국가에서 현대국가로 진행됨에 따라 언론기관도 거대화 · 독점화 · 집중화하여 다양한 정보나 소수자의 의견이 사회에 전달되는 것을 저해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 정보의 보내는 측인 언론기관과 정보의 받는 측인 수용자(국민)라는 2개 계층이 자본가와 노동가의 관계처럼 발생하게 되었다. 여기서 미디어 기술의 발달로 정보의 보내는 측인 언론기관도 국가처럼 「비인격화된 보이지 않는 규율권력」인 '파놉티콘'의 주체가 되었다.

배런(J. A. Barron)은 매스미디어의 발달이 '미디어 경영가(media manager)'라는 새로운 계급을 낳게 했으며,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는 그들만의 독점물이 되었다고 주장한다.¹⁶⁾ 원래 언론의 자유의 향유 주체로서 언론기관과 국민이 일체를 이룬다고 생각되었던 양자간에 일정한 대립관계가 생겨 매스미디어의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언론의 자유의 분리는 필연적으로 등장을 하게 되었다. 「비인격화된 보이지 않는 규율권력」인 국가와 매스미디어에서 소외받는 정보의 받는 측인 국민(수동적 수용자)은 자신의 의견표명을 위해서, 데모, 집회, 빠라살포, 팜플렛 등의 표현 수단을 통해 국가나 매스미디어에게 관심을 끌려고 하나, 그 전달 수단은 국가나 매스미디어에 비해 너무나 미미하다.

여기에서 국민은 어떠한 형태로든지 국가나 매스미디어에게 액세스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와 매스미디어의 입장은, 국민의 알권리도 중요하지만, 국가는 국가비밀 보호를 이유로 매스미디어는 편집의 자유를 이유로 국민의 알권리나 정보에 대한 액세스를 거부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이러한 언론자유 구조 변화 때문에 종전의 국가권력과 매스미디어(국민포함)의 긴장관계의 양면구조 관계는 「국가 대 매스미디어 대 국민」의 3면관계 구조가 되었고, 이 관계 중 가장 약자이고 수동적인 수용자인 국민에게 정보를 액세스하고 의견 등을 표명할 수 있는 알권리와 액세스권을 부여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알권리나 액세스권이 등장하더라도 지금까지는 국가와 매스미디어들의 이

16) J. A. Barron, *supra* note 6, p.56.

해관계로 국민들에게 불균형·편파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적 문제이다. 표면적으로는 국가와 매스미디어가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공공의 광장(public forum)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것처럼 떠들지만, 실질적으로는 국민들이 진실로 알기를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정보조작을 만들어 왜곡된 사실을 보도하거나 자신들에게 불리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도 상당하다.

일반국민들이 자신의 의견이나 주장을 알리기 위해 독자투고나 우편, 전화, e-mail, 의견광고, 반론권행사 등을 하더라도 전달범위는 극히 제한적이고, 매스미디어를 이용하고 싶어도 비용이나 매스미디어 측의 편집권 등의 이유로 거부되거나 제한을 당하는 경우도 많다. 국가는 정보 비밀보호를 이유로 매스미디어는 보도의 자유와 편집권을 이유로 국민들의 의견이나 주장을 검열함으로써, 국가나 매스미디어가 국민의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고 견제하게 된다. 이는 언론자유 의 형식적·불평등적인 3면관계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인 것이다.

Ⅲ. 유비쿼터스 사회에서의 언론권 주체의 새 패러다임-전자파놉티콘과 전자시놉티콘

1. 언론권 주체의 새패러다임 논거

(1)네트워크의 쌍방향적 그물망 관계로의 변화

과거 중세에는 절대왕권이 주권을 상징하여 국왕의 권한은 막강하였다. 당시 국왕은 자신에게 도전하는 반역자는 군중이 운집한 장소에서 공개처형을 하였다. 국왕의 권력의 절대성을 보여주는 공개처형은 국왕의 인격화를 국민에게 보여 주었다.

그러나 근대국가에 들어와서는 국왕이나 통치자의 권력은 ‘비인격화된 보이지 않는 규율권력’으로 바뀌게 되었다. 처벌 역시 감시시스템을 통해서 내부화되었다. 모든 사람이 모두의 행동을 감시하게 되었다. 이런 방식의 대표적인 것이 푸코(M. Foucault)가 말한 ‘모두 볼 수 있다’라는 의미의 ‘파놉티콘(panopticon)’이다.¹⁷⁾ 정부, 언론사, 학교, 병원, 군대 등에서 서류를 만들고 평가하고 분류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면서 「비인격화 된 보이지 않는 규율 권력」이 개인을 감시하고 규율하고 통제하게 된다. 「비인격화 된 보이지 않는 규율 권력」은 산업사회에서도 ‘모두 볼 수 있다’라는 의미의

17) 장승권외, 전게서, 13면.

‘파놉티콘(panopticon)’이 그대로 적용된다. 산업사회에서는 「비인격화 된 보이지 않는 규율 권력」의 주체인 근대국가에서 보다 더 많이 확산되어 사회전반에 파놉티콘이 적용되었다. 당연히 언론기관도 파놉티콘이 적용된다. 언론기관은, 학교이나 병원 등의 단체와 다르게 국가 못지않게 영향력이 막강하여, ‘비인격화된 보이지 않는 규율 권력’의 주체로서 언론의 자유(특히 보도의 자유, 편집의 자유 등)를 내세워 국민을 감시하고 규율하고 통제하였다. 산업사회에서는 언론권 주체의 구조가 3면 관계(국가 대 언론기관 대 국민)이지만 상호간 일방향적 관계이므로, 국민은 국가와 언론기관에 비해 일방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이는 형식적·불평등적 3면관계의 수동적 주체였다.

그러면 유비쿼터스 사회에서는 파놉티콘은 어떻게 적용되며 또 어떻게 언론권 주체의 3면관계에 영향을 줄 것인가?

푸코에 의하면 ‘전자파놉티콘(electronic panopticon)도 근대사회에서 볼 수 있는 「비인격화 된 보이지 않는 규율 권력」은 파놉티콘의 행사 방식과 같다’¹⁸⁾라고 하였다. 그러나 프랑스 철학자 들뢰즈(Gilles Deleuze)는 푸코의 이러한 인식을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으로 일반화시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푸코의 규율사회를 벗어난 새로운 ‘통제사회(control society)’라고 주장했다. 그에 의하면 규율사회는 증기기관과 공장이 지배하고 요란한 구호에 의해 통제되는 사회이지만, 통제사회는 컴퓨터와 기업이 지배하고 숫자와 코드에 의해 통제되는 사회이다. 벤담의 파놉티콘이 규율사회에 적합한 감시의 메커니즘이라면 전자파놉티콘은 통제사회에 적합한 감시의 메커니즘인 것이다.¹⁹⁾ 감시가 범사회적이고 일상적인 것이 되면서, 간수가 중앙감시탑에 숨어서 주변의 감방을 감시했던 파놉티콘과 달리 전자파놉티콘에는 중앙감시탑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졌다. 중앙감시탑 한곳에서 관장되는 것이 아니라 각 조직이나 단체 등에서 소규모 감시 네트워크가 독립적으로 분산되어 존재한다. 또 이런 경우에 감시자가 피감시자를 일일이 자발적으로 규율을 강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피감시자들은 자신들이 감시당한다는 사실도 모르고 지내는 경우도 허다하다. 전자감시는 벤담의 원형감옥이라는 제한된 공간을 뛰어넘어 도시, 국가, 세계로 그 관장 영역을 넓혔고 동시에 이를 관장하는 권력자가 위치하던 중앙의 감시탑과 같은 공간도 다양한 네트워크의 그물망으로 분산시켰다.²⁰⁾

푸코는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초에 이르는 근대사회에서는 절대 왕정 시대의 ‘스

18) 장승권외, 상계서, 15면.

19) 홍성욱, 파놉티콘-정보사회 정보감옥, 책세상, 2002, 98면.

20) 더욱 상세한 내용은 홍성욱, 상계서, 98-99면 참조할 것.

펙터클의 사회“가 ‘감시사회(파놉티콘의 사회)’로 바뀌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산업사회에서는 스펙터클(보는 것)과 파놉티콘(보여지는 것) 사이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고 오히려 양자가 융합된 사회가 되었다.²¹⁾ 이 사회에서는 보여짐으로써만이 아니라 보는 과정에서 감시와 통제의 네트워크에 포함된다.²²⁾

그런데 유비쿼터스 사회에서는 이러한 상황관계가 바뀌고 있다. 통제관리자인 조직내 지식엘리트인 국가와 매스미디어가 전자파놉티콘을 통해 스펙터클(보는 것)과 파놉티콘(보여 지는 것)의 대상인 ‘국민’들을 감시하고, 국민들은 여기에 대한 반발로 국가와 매스미디어를 역감시하는 전자시놉티콘을 가짐으로써 함께 서로 통제하고 영향을 미치는 쌍방향 관계가 되어 간다. 인터넷의 발달과 디지털 미디어의 다매체 · 다채널화는 한방향의 시선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네트워크 환경에서는 다중심 혹은 분산화 된 네트워크가 쌍방향으로 마주 보고 있다.

(2) 퍼스널 미디어 혁명과 전자시놉티콘(역감시)의 등장

인터넷의 발전으로 신문과 방송의 경계가 없어지고 문자 · 음성 · 영상이 통합하는, 디지털 미디어가 나타나게 되자 이들 수동적 수용자들도 퍼스널 미디어를 통해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사상이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되었다. 유비쿼터스 사회가 디지털 미디어의 다매체 · 다채널화는 신문의 편집권과 방송의 편성권을 수용자(독자와 시청자)에게 넘겨주는, 퍼스널 미디어 혁명을 야기 시킨 것이다.

그 실례가, 지난 2002년 한일월드컵 공동개최에서 소수의 붉은 악마가 시작한 거리응원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것, 그해 대통령선거에서 인터넷을 통한 노사모의 선거운동으로 노무현 대통령 후보가 당선된 것, 미군 장갑차에 압사당한 두 여중생 추모 촛불시위 등에서 퍼스널 미디어 혁명이 나타났다. 이들 사건의 공통점은, 처음에는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언론의 관심 밖이었지만, 인터넷상에서는 국민들에게 주요한 관심과 토론거리였고 사이버공간상 게시판, 블로그, 홈페이지, 미니홈피 등에서는 활발한 토론의 장이 되었기 때문에, 언론에서 뒤늦게 관심을 갖고 주요 뉴스로 보도하였다는 것이다. 퍼스널 미디어의 혁명은 이들에게 기존 네트워크권력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장을 제공하여 준 것이었다. 그 결과 유비쿼터스 사회는, 가

21)스펙터클(보는것)과 파놉티콘(보여지는것)의 융화에 대해서는, 홍성욱, 상계서, 102~103면 참조할 것: 또 Guy Debord, Society of the Spectacle(Detroit: Red and Black, 1977): Jonathan Crary, "Spectacle, Attention, Counter Memory", October50(1989) 등을 참조할 것.

22) 홍성욱, 상계서, 103면.

장 소외받는 수동적 국민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여론을 주도하는 수용자(국민) 중심의 쌍방향적 새로운 언론자유 3면관계가 설정되어, 국가와 언론기관뿐만 아니라 국민에게도 네트워크권력이동 현상이 나타나는 다중심 혹은 다분권화 사회가 도래된 것이었다. 퍼스널 미디어 혁명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전자파놉티콘적 기존의 비인격화된 보이지 않는 규율 권력이 어느 정도 붕괴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언론권의 주체가 일방향적 관계에서 쌍방향적 3면 관계로 변화시킨 요소는, 디지털 미디어 기술의 발전으로 야기된 ‘퍼스널 미디어 혁명’을 통해서 국민이 갖게 된 ‘전자시놉티콘’의 등장인 것이다.

유비쿼터스 사회에서는 전자파놉티콘과 전자시놉티콘의 긴장관계는 쌍방향적 커뮤니케이션의 특성으로 사이버공간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국가와 매스미디어가 전자파놉티콘을 행사하면, 전자감시에 침해당한 네티즌(국민)은 각종 인터넷 게시판, 블로그, 홈페이지, 미니홈피 등에서 다양한 여론형성과 정보교환 그리고 이를 통한 사회운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네티즌(국민)의 인터넷을 통한 여론형성과 정보교환 그리고 이를 통한 사회운동이, 기존의 ‘전자파놉티콘’의 권력에 대한 새로운 접근으로 나타나고 그 결과 ‘전자시놉티콘’이라는 새로운 권력관계가 만들어 지고 있다. 이 새로운 권력관계를 만들어 내는 사람은 지금까지의 국가나 매스미디어로부터 소외받아온 국민들이다. 이들은 신문이나 방송에서 자신의 견해를 주장하는 기회가 전혀 없거나 적었던 수동적 수용자들이다.

유비쿼터스 사회는, 인터넷과 디지털 네트워크 기술의 발달로 이들 수동적 수용자들의 입장인 국민들이 능동적 언론권의 주체가 되어, 전 세계 어느 곳에 있는 정보일지라도 검색하여 이용할 수 있고, 정보의 생산자와 소비자의 역할을 언제라도 바꿀 수 있게 함으로써 능동적으로 지식을 추구할 수 있고, 자신의 홈페이지나 미니홈피, 블로그 등을 통해 사상이나 의견, 주장 등을 전 세계에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다. 이는 국가와 매스미디어가 갖는 은폐적 · 수직적 · 불평등적인 전자파놉티콘 원리의 구현에 대한 반작용으로 투명적 · 수평적 · 평등적인 전자시놉티콘 원리가 나타나는 유비쿼터스 사회의 속성인 것이다. 유비쿼터스 사회의 이러한 속성은, 각 언론권 주체의 상호작용성과 상호연결성으로 구성된 디지털미디어에서, 전자파놉티콘과 전자시놉티콘의 긴장관계에서 적절한 배분을 어떻게 하는가가 중요한 쟁점이 된다.

원래는 국가와 언론매체는 자신들이 개발한 디지털 네트워크 기술의 우위로 국민보다 월등히 앞서는 정보와 지식의 갖게 되어 전자파놉티콘의 배분과 균형의 불평등

문제가 초래되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술한 것처럼 전자파놉티콘의 대상인 국민의 입장에서는 전자파놉티콘의 불평등에 대한 반발로 상대적인 전자시놉티콘의 원리가 등장하게 되었다. 전자파놉티콘과 전자시놉티콘 때문에 언론권의 주체인 구성원들간의 역학관계가 바뀌고 있으며, 이 가운데 국가와 국민, 언론과 국민, 국가와 언론 간의 역학관계가 새롭게 재편되고 있다. 유비쿼터스 사회의 핵심인 디지털미디어와 네트워크는 전자파놉티콘을 활용함으로써 국가의 권력을 더 강력하게 만들기도 하고,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국민이 전자시놉티콘 원리를 내세워 국정에 참여함으로써 국민에게 힘을 실어주기도 한다.

이렇게 볼 때 네트워크 구조는 결코 중립적인 것이 아니며, 경우에 따라 중앙집권화를 강화시키기도 하고 분권화현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²³⁾ 중앙집권화와 분권화의 반복현상으로 전자파놉티콘 원리와 전자시놉티콘 원리가 완전히 균형을 잡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힘이 약한 국민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 유비쿼터스 사회의 속성이다.

전자파놉티콘과 전자시놉티콘의 긴장관계가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이 사이버공간이다. 사이버공간의 포털 사이트, 각종 게시판, 블로그, 홈페이지, 미니홈피 등은 자기 자신의 사상이나 의견, 정보 등을 올리는 사적 공간이다. 그러나 이 사적 공간에 쓴 글이 유비쿼터스 사회에서는 매스미디어만큼 사회적 영향력이 상당하게 된 것이다. 이는 사이버공간이 갖는 미디어적 성격 때문이다. 사이버공간상 블로그, 홈페이지, 미니홈피, 게시판 등은 사적공간이지만 거기에 실린 콘텐츠는 불특정다수가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퍼스널 미디어(personal media)이다. 이들 퍼스널 미디어는 기존 언론보다 더 빠른 속보성과 현장성도 갖추고 있다. 예를 들면 2003년 이라크 전쟁에서는 '살람팍스'라는 필명의 블로거가 바그다드의 전쟁상황을 전세계에 생생하고 신속하게 전달하여 블로그의 영향력을 실감하게 하였다. 최근에는 동남아시아 지진과 쓰나미가 닥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담은 블로그 뉴스가 기존 언론을 압도하였다. 이렇게 사이버 공간의 블로그, 홈페이지, 게시판 등은 전자파놉티콘과 사회적 공론의 장으로 개인의 미디어의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지난 2002년 한일 월드컵 공동개최에서 소수의 붉은 악마가 시작한 거리응원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것, 2005년 고교 1년생들의 고교내신등급제 반대 시위 등에서 '퍼스널 미디어 혁명'이 나타났다. 이들 사건 사건의 공통점은, 처음에는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언론의 관심 밖이었지만, 인터넷 등에서는 국민들에게 주

23) Jan van Dijk, The Network Society, (Sage Publications, 1999), pp.78~79.

요한 관심과 토론거리였고 사이버공간상, 게시판, 블로그, 홈페이지, 미니홈피 등에서는 활발한 토론의 장이 되었기 때문에, 언론에서 뒤늦게 관심을 갖고 주요 뉴스로 보도하였다는 것이다. 이들 일련의 사건들을 살펴보면, 지금까지 언론자유와 3면관계 구조에서 전자파놉티콘의 객체이며 가장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국민이, 유비쿼터스 미디어의 사회적 특성을 이용하여 전자파놉티콘의 주체인 국가와 매스미디어처럼 전자시놉티콘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준 것이 퍼스널 미디어 혁명이다. 이 퍼스널 미디어 혁명은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권력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으며, 사이버 스페이스에서 '언론권의 능동적 주체' (즉 네티즌의 인터넷을 통한 활발한 여론형성과 그리고 인터넷을 통한 활발한 정보교환과 토론에 의한 결론 도출로 국민들의 자발적·참여적 사회운동<여기서 국민은 전자시놉티콘의 주체가 된다>)의 새로운 가능성을 본 것이다.

2. 각 언론권의 주체 상호간 균형적 언론자유의 실현을 위한 모색

(1) 실질적 · 균형적 언론 자유의 실현 문제

지금까지 권력의 지배는 전자파놉티콘의 주체인 국가와 매스미디어가 갖고 있었다. 그러나 위의 일련의 사건들에서 전통적 전자파놉티콘을 갖는 권력지배가 무너지거나 최소한 약화되어 가는 모습을 이제 본 것이다. 인터넷을 통한 여론형성과 정보교환 그리고 이를 통한 자발적·참여적 사회운동으로, 붉은 악마의 응원열기, 주요 언론매체가 선호하지 않는 비주류 대통령 후보의 당선, 고교1년생들의 내신등급 반대운동 등은 정부의 정책이나 언론에 소외를 받던 다수의 국민이 주도한 사회운동이었다.

문제는, 근대국가에서 통용되던 국민의 지배수단인 파놉티콘으로 국민을 통제하던 「비인격화된 보이지 않는 규율권력」은, 정부의 정책이나 언론에 소외를 받던 다수의 국민이 주도한 인터넷 등을 통한 사회운동이 등장한 지금은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이다.

푸코에 의하면 근대사회에서 볼 수 있는 「비인격화된 보이지 않는 규율권력」의 행사 방식은 유비쿼터스 사회에서는 '전자파놉티콘'과 같은 것이라고 하였다.²⁴⁾ 푸코의 개념을 이용하면 파놉티콘 원리란 객체를 잘 볼 수 있도록 만드는 조직적 메커니즘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파놉티콘 원리는 대상을 좀 더 분명하게

24) 장승권외, 전게서, 15면.

볼 수 있게 하여 주고 투명하게 만들어 준다. 그래서 그 사회 조직의 구성원을 통제할 수 있게 된다.²⁵⁾ 그 사회 조직에 파놉티콘 원리가 적용되면 사회적 투명성을 높여 준다. 파놉티콘 원리는 그 사회조직을 서로 밀접하게 연결시켜 준다. 그리고 긴밀하게 연결된 네트워크로 만들어진 사회조직을 정형화된 프로그램을 통해서 바꾸어 간다. 이를 통해서 사회조직간의 네트워크를 투명하게 잘 보이도록 만든다. 이러한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어 내는 파놉티콘 원리는 일정한 「비인격화된 보이지 않는 규율권력」에 의해 통제된다. 또 「비인격화된 보이지 않는 규율권력」은 파놉티콘 원리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파놉티콘 원리의 이러한 속성은 정보통신기술과 쉽게 동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비쿼터스 시대에도 디지털 권력 현상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유비쿼터스 사회에서는 ‘전자파놉티콘’이 새로운 권력관계를 만들어 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유비쿼터스 시대 이전 사회에는 ‘전자파놉티콘’을 설계하고 관리하는 주체는 국가와 언론이다. 이들은 전자파놉티콘이라는 시스템 속에서 통제의 주체이며 「보이지 않는 존재」이다. 그리고 피지배층인 국민은 권력 네트워크의 주변부에 속하며 「보여지는 대상」이다. 그런데 유비쿼터스 사회에서는 이 관계가 바뀌고 있다. 유비쿼터스 사회는, 통제자인 「보이지 않는 존재」와 피통제자인 「보여지는 대상」들이 서로 통제되고 영향을 미치는 긴장 속에서, 쌍방향적 커뮤니케이션 관계이다. 이 관계는 디지털 미디어의 다매체·다채널화에 따라 다중심·분산화 된 네트워크가 쌍방향으로 마주 보고 있는 것이다.

유비쿼터스 사회는 이러한 쌍방향적 커뮤니케이션의 특성 때문에, 사이버 공간에서 국가와 언론은 국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여론 형성과 정보교환을 수단으로 전자파놉티콘의 주체가 되고, 국민은 일방적·수동적 수용자로 보는 전자파놉티콘 체제에 반감을 갖고 각종 포털 사이트 게시판, 홈페이지, 미니홈피, 블로그 등에서 자신의 사상이나 의견 등을 개진하는 전자시놉티콘의 주체가 되어, 전자파놉티콘과 전자시놉티콘이 「비인격화된 보이지 않는 규율권력」으로 국민을 통치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전자파놉티콘에 대한 전자시놉티콘의 등장은 기존의 형식적·불평등적 언론 자유의 3면관계 구조를 실질적·평등적 언론 자유의 3면관계 구조로 전환시킬 수 있다는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형식적·불평등적 언론 자유의 3면관계 구조를 만들었던 전자파놉티콘적 언론기본권 해석은 전자시놉티콘이 등장하는

25) R. Cooper, "Modernism, Postmodernism and Organizational Analysis 3: The Contribution of Jacques Derrida", Organization Studies, Vol. 10, No. 4, pp.479~480.

유비쿼터스 사회에는 논리적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므로, 이 시대에 맞는 전자시놉티콘적 언론기본권 해석을 하여 실질적·평등적 언론 자유의 3면 관계 구조로 전환하는 입법적 대책이 필요한 것이다.

(2) 유비쿼터스 사회에서 전통적 범규범의 문제

국가와 매스미디어가 능동적 전자파놉티콘의 주체이고 국민에게는 수동적 전자파놉티콘 주체이던 시절의 형식적 언론 자유의 3면구조하에 제정된 언론관련법은 유비쿼터스 사회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예를 들면 영화, 연극, 가요 등에서 사라져버린 검열이 인터넷에서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규제를 받음으로써 표현의 자유가 제약 받고 있다. 또 범죄자의 유전자를 국가가 관리하겠다는지, 주민등록, 의료보험, 신용카드 등을 갖은 국민의 각종 개인정보를 통합한 전자주민카드를 국가가 발급하고 관리하겠다는 발상은 벤담의 원형감옥에서 유래한 파놉티콘을 국가가 독점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저작권자를 보호하겠다는 명분의 저작권법도 온라인 디지털 정보이용을 위축시키고 디지털도서관에 대한 액세스권을 오히려 막고 있다. 이는 모두 인터넷과 디지털 미디어의 수평적 연결기능의 개방성과 보편성의 특성을 외면하여,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제한하고 정보인권을 억압하는 것이다.

반 다이크(Jan van Dijk)도 유비쿼터스 시대에 들어 기존의 법률 및 제도적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데 따르는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첫째, 네트워크 미디어를 통한 정보와 커뮤니케이션은 물리적 실체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감지할 수 없고, 언제나 가변적인 속성을 갖고 있다. 이에 대해 기존의 범규범은 분명한 법적 기준을 갖고 있고 지역에 따라 다른 형태로 구체화되어 있으며 책임과 권한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시대에 그대로 적용하기가 어렵다. 둘째, 국가가 네트워크 시대에 맞는 새로운 입법을 제정하더라도 이 법을 시행하는데 문제가 있다. 디지털미디어의 속성상 지리적 경계를 넘어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적인 경계의 법 기준을 규정하기가 곤란하다. 따라서 법을 위반하더라도 증거 인멸이 쉽다. 셋째, 네트워크 기술은 아주 빠르게 국제화되는 반면에 법은 영향권이 국내에 제한되는 것이 원칙이다. 넷째, 기존의 법률은 산업혁명 또는 산업 활동과 관련된 개념에 기초를 많이 두고 있다. 디지털미디어와 함께 중요한 개념으로 떠오른 ‘정보’, ‘데이터’, ‘프로그램’, ‘전자커뮤니케이션’, 같은 기본용어 정의에 대하여 새롭게 정의하지 아니하면 네트워크 기술의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률적 통제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²⁶⁾

이처럼 일반적으로 새로운 사회를 맞이하여 새로운 사회현상에 맞는 법률 제정은 상당히 어려우며, 그것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하더라도 급변하는 환경에 발맞추어 융통성 있고

체계적인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 산업사회에서는 국가의 법률제정에 국제법의 원칙인 ‘국내문제불간섭의 원칙’이 적용되어 국가는 자율적인 체계(autonomous system)로서 성격을 갖고 있었으나, 유비쿼터스 사회에서는 세계화·지구촌의 추세 때문에 ‘국내문제불간섭의 원칙’이 완화되어 국가의 자율적인 법체계의 성격의 지닌 법규범 제정이 점점 약화되어 가고 있다.

그 이유는, 첫째로 국제적으로 형성된 디지털 네트워크는 국내법으로 규제하기가 어렵다. 인터넷을 통해 파일(file)을 한 나라로부터 다른 나라로 초광속으로 전송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보의 이용을 가장 비용이 적게 들고 네트워크 규제가 덜한 국가에서 정보를 분산 및 처리하게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어떤 국가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본국에서 편집 및 저장하고 그 정보를 제3의 국가에서 유통시킴으로써 세금과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법들을 교묘히 회피할 수 있게 된다. 둘째로 디지털 콘텐츠의 제작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내거나 규제의 대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업자가 있는 나라에서만 그러한 제한적 조치가 취해지기 때문에 디지털 콘텐츠의 제작자가 속한 나라는 속수무책이다.

셋째로 국제적 네트워크를 통해 어떤 국가의 군사기밀 정보가 해킹당하면 그 나라의 국가 안보가 흔들릴 수 있다. 이 경우 국제정보 네트워크들은 군사적 도구로서도 매우 중요할 뿐 아니라 그 나라 네트워크에 대한 테러는 곧 그 나라에 대한 군사적 행동과 맞먹는다고 할 수 있다. 넷째로 후진국이나 개발도상 국가들은 폐쇄된 사회의 문화적 정체성과 정보사회의 후진성으로 선진 국가들의 위성방송, 인터넷과 같은 국제 네트워크 때문에 정보 불평등으로 정보주권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²⁷⁾

따라서 전통적 법규범의 문제점들을 유비쿼터스 사회의 특성에 맞추어 언론권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적용되는 체계적인 언론 관련법을 제·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

(3) 유비쿼터스 사회에서 개인정보통제권 문제

26) Jan van Dijk, supra note 19, pp.115~116.

27) Ibid., pp.124~125.

유비쿼터스 사회에서는 디지털미디어 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정보와 지식의 네트워크의 원활성이 디지털 권력의 핵심요소이다. 유비쿼터스 사회는 정보의 수집, 이용, 관리의 원활한 흐름을 통하여 사회 전반의 투명성을 증대시키고, 그 사회의 투명성을 토대로 수집한 정보의 데이터베이스를 기업과 국가가 이용하면 훨씬 인간생활에 물질적·정신적 윤택함을 줄 수 있다. 반면에 고도의 컴퓨터기술에 의한 디지털미디어 특히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데이터베이스를 불법으로 판매하는 행위나 네트워크의 익명성을 이용하는 범죄, 몰래 카메라 촬영행위나, CCTV에 의한 감시행위 등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행위도 증가하고 있다.²⁸⁾

반 다이크(Van Dijk)도 개인이 자신의 개인적 데이터에 대해 또한 그로인해 내린 결정에 대해 가지고 있는 통제력을 말하는 정보적 프라이버시(informational privacy) 권이 네트워크 미디어 시대에 이르러 더욱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²⁹⁾.

첫째, 네트워크 사용자들의 모든 행동은 언제라도 추적이 가능하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해 점차 많이 쓰이게 된 전자 화폐나 지능형 현금 등록기 컴퓨터 칩이 내장되며 인터넷에 연결된 온라인 전자 상거래를 통한 물품 주민 및 등록으로 인해 고객의 상세한 정보 및 행동 패턴이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되고 통계적으로 처리될 수 있다. 이로 인해 물품구매자의 인구 사회적 배경에 대한 정보를 얻어 시장조사 마케팅 및 광고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인터넷상에서는 정보 및 대화 서비스의 모든 단계가 소위 추적 기술(tracking technologies)에 의해 기록이 남는다. 웹마스터가 원한다면 그들의 사이트에 들어온 모든 사람과 사이트를 클릭한 모든 사람을 추적할 수 있으며, 로그 파일(log file)과 쿠키(cookie)를 이용한 추적방법도 있다. 이러한 추적은 사용자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 행해지는 것이 보통인데, 일반적인 웹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기 위해 기재해야 하는 질문지 등이 실제로는 자신의 프로파일(profile)을 완성해주기도 한다.

둘째, 기술의 발달로 인해 나의 정보가 의도하지 않게 상대방에게 도달한다. 예를 들어 디지털 전화기의 표시 화면에 송신자의 전화번호가 나타나도록 할 수 있는데 이는 전화와 관련된 통제권이 송신자에서 수신자로 전환됨으로 일견 통화자 개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회선 가입자의 전화번호가 자동으로 넘겨짐에

28) 이동훈, “유비쿼터스 사회에서의 언론권”,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제6권 제2호, 2005.6. 15~16면.

29) Jan van Dijk, op.cit., pp.135~140.

따라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항상 남아 있다.

셋째, 디지털미디어의 상호연결성이 높아짐에 따라 언제라도 다른 사람들이 접근하는 것에 대해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예를 들어 휴대전화 이용자는 언제라도 전화가 올 수 있다는 것을 늘 신경 쓰게 되었다. 이 경우 전화를 받지 않거나 전원을 꺼 둠으로써 외부로부터의 접근을 차단하거나 거부할 수는 있지만 그러한 경우 차후에 이를 변경하거나 스스로를 정당화해야 하는 일이 생기기도 하는데 이는 개인적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넷째, 일반 이용자들의 사적 공간이 고정됨에 따라 중앙으로부터의 통제가 쉬워진다. 점차 컴퓨터를 필요로 하는 작업환경이 늘어남에 따라 고정형 단말기를 이용해야 하는데 이 경우 고용인들의 업무진행 상황 및 성과뿐만 아니라 그들의 일상적인 행위가 관리자에 의해 추적당할 수 있다. 화상회의와 같은 원격 회의와 카메라 및 마이크가 장착된 멀티미디어 PC의 사용이 정보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업무효율을 높이지만 동시에 고용인들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잠재적인 새로운 위협이 되기도 한다.

이처럼 디지털미디어의 기술적 특성은, 전자파놉티콘 성격을 띠어 개개인의 생활을 일일이 감시할 수 있는 수 있게 되지만, 전자파놉티콘의 주체가 잘못 다루게 되면 국민 개개인의 데이터가 유출되어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게 되었다. 디지털미디어로 인해 발생하는 프라이버시 침해 사례는 정보의 수집단계, 정보의 관리단계, 그리고 정보의 이용단계 전반에서 무작위로 발생할 수 있다. 이제 프라이버시는 ‘다른 사람한테 방해받지 않고 혼자 있을 권리’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신이 통제할 권리’로 바뀌어야 한다.³⁰⁾

국가와 신문, 방송 등이 정보생산의 주류로서 정보와 지식의 통제권을 가지고 있던 과거에 비추어 볼 때, 유비쿼터스 사회의 디지털미디어는 정보사회 속에서 살아나가는 개인들에게 정보를 관리하고 통제하는 힘을 부여하는 것이다. 샤프로(Andrew L., Shapiro)는 이를 ‘통제혁명(control revolution)’³¹⁾이라고 하였다.

샤프로는 네트워크가 중심이 되는 디지털미디어 환경의 다음과 같은 속성으로 프라이버시 침해가 일상화 되기 때문에, 국민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서 정보의 통제력이 개인에게 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³²⁾

첫째로, 인터넷과 같은 망(net)은 다수와 다수의 쌍방향성(many to many

30) 이동훈, 전계논문, 17~18면.

31) Andrew L. Shapiro, The Control Revolution(New York: A Century Foundation Book, 1999)

32) Ibid., pp.15~16.

interactivity)의 특징이 있다. 다수와 다수의 쌍방향성은 인터넷상의 잠재적인 민주적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한다. 둘째로, 인터넷은 디지털로 이루어진 시스템을 갖는다. 이것은 정보의 저장, 사용, 조작에서 유연성이 보장된다. 디지털 형식에서 정보는 0과 1의 두 숫자 중 하나로 표현됨으로써, 자료의 복제가 쉽고 복제 횟수에 상관없이 정보는 완전하게 재현된다. 디지털 정보는 압축이나 조작이 용이하여 개개인이 정보를 쉽게 통제할 수 있다. 셋째, 디지털 네트워크는 패킷(packet)에 기반한 네트워크이다. 네트워크는 하나의 근원지를 가질 수 있거나 몇 개의 주요한 중심(hub)을 가지는데, 패킷화된 정보는 전송되는 과정에서 의미를 가지는 정보가 아니지만 도착지에서 재구성됨으로써 완벽한 의미를 전달하는 총체가 된다. 이렇듯 분산된 미디어 환경에서 전송되는 비트의 조각들로 인해 정보의 수문장(gatekeeper)은 이를 해독하기 어려워 정보를 통제하기 어렵다. 넷째, 인터넷은 접근하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다. 인터넷의 프로토콜인 TCP/IP가 비독점적이므로 어떤 이익집단이나 기관이 이러한 전송의 규약을 바꾸거나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이러한 디지털 미디어 환경의 속성으로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가 인터넷을 통하여 무차별·무분별로 이루어지고 있어 디지털미디어가 가져다주는 통제혁명의 모습은 국가와 매스미디어가 갖고 있던 정치·사회·문화 등등 정보 지배 권력이 인터넷과 같은 새로운 미디어 기술에 의해 국민에게 이양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디지털 기술 중 인터넷의 경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선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특징으로 하는데, 이 때문에 종전에 성역시 하던 국가간 국경을 네트워크 상으로는 모호하게 만들고 있고, 지구상 어느 곳이든 메시지나 정보를 전달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았다. 인터넷의 상호 연결 기능으로 인해 일단 접속만 하면 네트워크를 통해 접속한 모든 사람이 더불어 정보를 수집, 이용, 관리할 수 있으며, 자신의 취향에 따라 정보를 선택할 수 있는 정보통제권을 준다. 인터넷에 유통되는 디지털 정보의 속성상 과거처럼 국가나 매스미디어 등에 의해서 일방적인 통제나 관리가 되지 않으며 개개인에게도 정보의 통제권을 줄 수밖에 없다.

개인의 정보통제권을 적절하게 행사하려면, 지금처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위반에 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 각각의 개별법에 맡길 것이 아니라, 유비쿼터스 사회에 맞는 체계적인 통합된 가칭 “유비쿼터스 개인 정보 보호법”을 만들 필요가 있다.

IV. 결 어

유비쿼터스 사회에서는, 네티즌(국민)의 인터넷을 통한 여론형성과 정보교환 그리고 이를 통한 사회운동이, 기존의 '전자파놉티콘'의 권력에 대한 새로운 접근으로 나타나고 그 결과 '전자시놉티콘'이라는 새로운 권력관계가 만들어 지고 있다. 이 새로운 권력관계를 만들어 내는 사람은 지금까지의 국가나 매스미디어로부터 소외받은 국민들이다. 이들은 신문이나 방송에서 자신의 견해를 주장하는 기회가 전혀 없거나 적었던 수동적 수용자였다. 인터넷의 발전으로 신문과 방송의 경계가 없어지고 문자 · 음성 · 영상이 통합하는, 디지털 미디어가 나타나게 되자 이들 수동적 수용자들도 퍼스널 미디어를 통해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사상이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되었다. 유비쿼터스 사회가 디지털 미디어의 다매체 · 다채널화는 신문의 편집권과 방송의 편성권을 수용자(독자와 시청자)에게 넘겨주는, 퍼스널 미디어 혁명을 야기시킨 것이다.

그 실례가, 지난 2002년 한일월드컵 공동개최에서 소수의 붉은 악마가 시작한 거리응원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것, 그해 대통령선거에서 인터넷을 통한 노사모의 선거운동으로 노무현 대통령 후보가 당선된 것, 미군 장갑차에 압사당한 두 여중생 추모 촛불시위 등에서 퍼스널 미디어 혁명이 나타났다. 이들 사건의 공통점은, 처음에는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언론의 관심 밖이었지만, 인터넷상에서는 국민들에게 주요한 관심과 토론거리였고 사이버공간상 게시판, 블로그, 홈페이지, 미니홈피 등에서는 활발한 토론의 장이 되었기 때문에, 언론에서 뒤늦게 관심을 갖고 주요 뉴스로 보도하였다는 것이다. 퍼스널 미디어의 혁명은 이들에게 기존 네트워크권력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장을 제공하여 준 것이었다. 그 결과 유비쿼터스 사회는, 가장 소외받는 수동적 국민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여론을 주도하는 수용자(국민) 중심의 쌍방향적 새로운 언론자유 3면관계가 설정되어, 국가와 언론기관뿐만 아니라 국민에게도 네트워크권력이동 현상이 나타나는 다중심 혹은 다분권화 사회가 도래된 것이었다.

또 퍼스널 미디어 혁명을 계기로 감시당하던 수동적 국민들이 인터넷을 통해 국가와 매스미디어를 역감시하는 네트워크 권력 이동현상이 나타나게 되어, 이제는 각 언론권 주체간에 서로 통제되고 영향을 미치는 쌍방향 관계가 되어 가는 것이다. 즉, 인터넷의 발달과 디지털 미디어의 다매체 · 다채널화는 쌍방향적 의사소통관계로 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쌍방향적 네트워크 환경에서는 중심적 네트워크보다는 다

중심 혹은 분산화 된 네트워크를 만들어 내었고, 그 결과 국가나 매스미디어로부터 소외받던 국민 중심의 새로운 네트워크 권력관계인 전자시놉티콘적 언론권이 구체화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전자시놉티콘적 언론권은 인터넷을 통하여 홈페이지, 블로그, 게시판에 여론형성과 정보교환적인 글을 올리고 이를 통하여 사회운동화 하여 매스미디어의 관심을 끌게 하는 국민층이 갖는 전자시놉티콘적 언론기본권이다. 그러나 이 언론기본권이 아직 구체적 권리로 정착되지는 못하였으며, 일부 언론관련법령이나 언론사 내규에서 소극적으로 반론권, 독자투고, 의견광고, 독자나 시청자의 참여 프로그램 등에서 인정하고 있다.

퍼스널 미디어 혁명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전자시놉티콘적 언론기본권의 주체(즉 국민이 네티즌이라는 능동적 수용자 입장에서 인터넷을 통한 다양한 여론형성과 정보교환 그리고 이를 통한 사회운동을 전개하는 실질적·구체적 액세스권을 행사할 수 있다)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전자시놉티콘적 언론기본권은 지금까지의 형식적 언론자유 3면 관계에서 실질적 언론자유 3면관계로 끌어 올리는데 큰 기여를 할 것이며, 나아가서 국민주권주의의 실질적 구현에 이바지할 것이다.



▶ 이동훈

퍼스널 미디어 혁명(Personal Media Revolution), 언론권의 주체(Main Body of the right of the Expression), 전자과놉티콘(Electronic Panopticon), 전자시놉티콘(Electronic Synopticon), 개인정보통제권(Control of Individual Information)

[Abstract]

Main Body of The Right of Expression in Ubiquitous Society

-A Functional Analysis of Electronic Panopticon and Electronic Synopticon-

Lee, Dong-Hoon

In the ubiquitous society, formation of public opinion and interchange of information by netizens' internet, and the social movement with respect to them show a new approach to the power of electronic synopticon. As a result of this, a new relationship of power is made. Men making this relationship of power are the people who have been alienated from the state or mass media. They are passive accepters who do not have any chance or little chance to express their opinion in newspapers or media.

Since the boundary between newspapers and media disappears with the development of internet, digital media which combine letter, sound and image come out. These passive accepters can actively state their ideas or opinions through personal media revolution, where multi-media and multi-channel of digital media take over a newspaper editing and broadcast programming to the accepters (readers and viewers).

Nevertheless, men who design and manage the electronic panopticon in our society are the intellectual elites who hold a power network. These intellectual elites are the main body of control in the system of electronic panopticon, and watch people as the invisible existence. So most of the controlled people lie in the rim of power network, and are in a position of passive acceptor.

After a series of personal media revolution, this relationship is changed in a gradual way. Since the phenomena of network power movement takes

place, it becomes the bilateral relationship where the media control and affect each other. Due to the development of internet and the shift to multi-media or multi-channel of digital media, it changes to the bilateral relationship.